

한글
본문

식민 체험과 인문학적 세대감각

김윤식

* **지은이 | 김윤식** 1936년 경남 진영 출생으로 2001년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에서 정년퇴직하여 2010년 현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자 명지대학교 석좌교수로 있다. 문학사와 문학 이론 연구, 작가론·작품론을 위시한 실제 비평, 예술론·에세이 등 문학 예술의 광범위한 영역에서 거대한 학문적·문학적 성과를 이룩하면서 문학사가이자 문학평론가로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1. '상상의 공동체' 속에 놓인 세대감각

과연 국민국가란 한갓 상상의 공동체에 지나지 않는가. 이 물음이 인문학적 방법으로서의 세대 개념과 결부될 때 비로소 그 의미가 좀더 뚜렷해진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붓을 들었다. 이 과제는, 그러니까 근자에 나를 회의케도 고무케도 하는 문제인 까닭이다. 군은 즐겨 『내가 살아온 한국현대문학사』(2009)를 읽고 이렇게 말했다. 관념으로는 이해되나 실감할 수 없었다, 라고. 이와 비슷한 역사감각이 국민국가에도 적용되었음을 나는 직감했다. 국민국가가 한갓 상상의 공동체인지의 여부와는 무관한 자리에서 내가 인문학을 해왔다 해도 결과적으로는 상상의 공동체론에 수렴되는 것인 만큼, 세대 개념과 인문학의 관련 양상을 내 실감으로 논의를 봄으로써 군에게로 좀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것이다. 군이 내 쪽으로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를 듣고 싶은 욕망을 가능한 한 억누르고자 하지만 그게 뜻대로 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 해도 그러한 노력의 한 조각이 이 글에서 감지된다면 하고 바랄 뿐이다.

군도 알다시피, 지난 세기 이 나라의 삼대 천재인 벽초, 육당, 춘원 등을 비롯, 걸출한 영재들이 현해탄의 높은 물결과 그 수심을 앞에 두고, 자기를 찾기 위한 방도가 민족과 국가를 찾는 일임을 통렬히 깨달았고, 또 그 때문에 돌연 자기를 송두리째 잃고 길거리의 돌맹이 신세가 되기도 했으며, 또 가까스로 그런 몸짓을 면했다 해도 헛살이 너무 부시고 뜨거워 그늘을 찾아 헤맸다. 그러나 그러한 고민의 밀도랄까 실상을 군도 나도 체감하기는 실로 어렵다. 물론 관념으로는 군도 나도 어느 수준에서 이해할 수는 있다고 하겠지만, 그래서 철학사, 사상사라든가 정치사, 문학사 등의 인문학이 이루어질 수는 있겠지만, 실감이 결여된 점에서 볼 때 제한적이라 할 수밖에 없다고 나는 믿는다. 이러한 믿음은 인문학을 한다고 해 온 나로서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강해진다.

그렇다고 내가 관념적 이해를 밀어내거나 그 의의를 깎아 내리려는 것은 결코 아님에 주목하길 바란다. 마찬가지로 실감적 이해에 일방적으로 기울어졌다

고 오해하지 말기 바란다. 이 두 종류의 이해가 서로 모순되더라도, 있는 그대로 동시에 바라보고 싶을 따름이다. 그 방법 중의 하나로, 우선 두 이해 사이의 틈이랄까 차이를 알아보는 길이 있을 수 있다. 관념적 이해와 실감적 이해의 모순이 어떤 사상가에게도 있다는 것, 있되 그것이 그 사상가가 지닌 보이지 않는 힘일 수도 있다는 점에 유독 내 관심이 가는 것이다. 그 곡절을 내가 지금은 잘 설명할 수 없지만, 한쪽으로 편향된 나 자신에 대한 반성이라는 의미에서도, 또 오늘의 인문학의 모종의 가능성을 내 나름대로 모색하기 위해서도 그러한 관심 표명은 유효하지 않을까 싶다.

다듬어 말해 그것은 세대감각으로 요약될 수 있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나 자신의 세대감각이 논의의 측도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를 출발점으로 하여 군의 앞 세대에 속하는, 이 나라의 역사적 고비를 헤쳐 온, 이른바 386 세대의 감각을 문체 삼아 보고 싶다. 그 다음 차례에 탈식민지 시대의 인문학도인 군이 놓인 자리를 더듬어 보고자 한다.

2. '민족/민족어'와 '국가/국어' 틈에 낀 인문학

관념으로서는 이해할 수 있어도 실감은 할 수 없다는 이 명제를 세대감각이라 부를 것이라면, 내게 있어 그것은 국문학 연구자의 제1세대인 도남 조운계(1904~1976)에서 왔다. 도남은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주장했다.

국문학은 국어로써 한민족의 생활을 표현한 문학이다. 그러니까 국문학의 국문학됨의 필수 조건은 국어로 표현될 것이다. 이것은 아마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국문학 개설』, 동국문화사, 1955, 33쪽)

제일 먼저 주목되는 것은 '국어'가 아닐 수 없다. 그것은 국가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상상의 공동체로서의 근대 국가, 그러니까 국민국가가 국가의 장대한 폭력으로 만들어 낸 것이 국어(국가어)이며 이로써 상상의 공동체의 성립

이 가능했다. 그렇다면 문학은 어떤 것인가. 그 해답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바, '국어'가 전제됨으로써 가능했던 것이다.

국문학은 곧 이 국어를 표현도구로 하며 이루어진 언어 예술이다. 그러니까 국문학이야말로 가장 구체적인 우리 민족 생활의 표현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우리의 생활을 묘사하는 것은 비단 문학만은 아니다. 음악, 회화, 조각, 건축, 의상, 심지어는 일용잡기로서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모두 간접적인 것이다. 그러나 문학은 마음과 정신이 스며 있는 언어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느 것보다도 가장 직접적이요 구체적인 것이다. 국문학사가 곧 민족의 생활사가 되고 민족 정신의 연원을 고전문학에서 찾는다는 이유는 여기 있는 것이고 국문학과 민족과의 관계는 국어와 민족과의 관계나 별 다름이 없는 것이다.(앞의 책, 23쪽)

여기에서 드러난 '국가/국어'와 '민족/민족어'란 어떻게 이해해야 적절할까. 군은 금방 이렇게 지적할 것이다. 도남이 자기모순에 빠져 있다, 라고. 또 군은 아마도 조금 불안하여 금방 이렇게 덧붙이지 않을까 싶다. 이 모순 또는 자기분열은 도남에겐 비자각적이었다, 라고. 국가를 전제로 한 '국문/국어'를 내세우고 또 그것으로 하는 문학을 국문학이라 했을 때 도남의 의식 속에는 무엇보다 국가가 전제되어 있었다. 그것이 근대의 국민국가든 조선왕조든 좌우간 국가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도남에겐 그 국가라는 것이 결여되어 있었다. 있는 것이라고는 '민족/민족어' 뿐이었다. 관념에서는 '국가/국어'를 지향하면서 심정적으로는 '민족/민족어'로 향하고 있었던 것이다. 국가의 결여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도남으로 하여금 국어라는 논리적 사고를 갖게끔 한 것은, 그리하여 도남으로 하여금 논리와 심정의 모순을 가져다준 것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였을까. 군과 더불어 이 문제를 먼저 검토해 보면 어떠할까.

근대를 문제 삼을 경우, 이 시대를 이해하는 제일 큰 전제는 식민 체험이 아닐 수 없다. 근대적 학문의 영역에서 그러한 체험은 경성제국대학(1926)을 들 것

이다. 일본 제국에서 여섯번째로 설립된 경성제국대학은 식민지에 세워졌다는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근대적 학문의 교육 기관이란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물론 일본 국내의 제국대학에 들 수도 있고 구미의 학문으로도 길이 열려 있었지만, 그것들은 경성제대와는 동열에 놓일 수 없다. 경성제대 존립의 제일 큰 부분은 무엇보다 식민지 통치의 산물이란 점이다. 바로 여기에 이 대학 자체가 고유하게 갖는 자기모순이랄까, 논리와 심정의 틈이 개재했다. 두루 아는 바, 근대적 학문이란 그 속성상 가치중립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여기에는 식민지적 조건이 개재해 있었던 만큼 자기모순성이 현실적으로 존재했다. 식민지적 조건에 대한 연구란 기왕에 넘칠 정도로 논의되었지만 그 가치중립적인 것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빈약한 편이다. 만일 이 양자의 연구가 심도 있게 이루어진다면 경성제대 자체가 안고 있는 자기모순이랄까 논리와 심정의 틈이 한층 뚜렷해질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그것은 도남의 모순성과 쌍을 이루는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 나는 군의 세대감각을 빌려 이렇게 지적한 바 있다. “경성제대, 그것은 한 가지 고등교육기관인 것. 일본 것도 아니지만 조선 것도 아닌 것. 그 자체로 존재하는 지(知)의 한 가지 영역인 것. 이런 자리란 벌써 근대에 의한 초월이 아니겠는가”(『최재서의 『국민문학』과 사토 기요시 교수』, 역락, 2009. 머리말)라고. 그 근거를 밝히기 위해서 그 책을 썼거니와 그 중 사소한 몇 가지 사례를 이 자리에서 잠시 보이기로 한다.

최재서에게 일본 문학을 가르친 다카기 이치노스케(高木市之助) 교수의 회고록 속엔, “당신들 교수들이 아무리 조선인 학생을 일본 정신으로 훈도하려 해도 어렵었다”(高木市之助, 『国文学50年』, 岩波新書, 1967, 140쪽)라고 그가 행패를 부렸다는 사실이 들어 있음을 지적하면 어떠할까. 또 그가 1940년 2월에 실시된 창씨개명을 1944년 1월에 감행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 또 어떠할까. 그 악명 높은 『국민문학』을 창간·주관하면서도 당당히 본명 최재서를 사용했다는 것, 대동아작가대회에 참석할 때에도 본명으로 일관했다는 사실 등은 대체 무엇인가. 최재서와 사제 관계에 있던 사토 기요시(佐藤清) 교수의, 경성제대 학풍에 대한 언급 또한 인상적인 바 있었다. 특히 우수한 조선인 학생들이 모인 것은 제국대학의

이름에 이끌렸다기보다도 외국문학에 그들의 목마름을 풀어주는 어떤 요소가 제국대학 속에 있었던 까닭이라 본 그는 이렇게 결론짓고 있다. “20년간 조선인 학생과 교제하는 동안 얼마나 그들이 민족의 해방과 자유를 외국문학 연구에서 찾고자 하고 있었는가를 알고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佐藤清全集(3)』, 詩聲社, 1964, 259쪽)라고. 이러한 현상은 말을 바꾸면 학문이 지닌 가치중립성에서 온 것이라 볼 수 없겠는가. 학문이란 논리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그 논리적 판단 기준이 심정적인 것과 모순을 유발한다면 어떻게 이에 대처해야 할까. 당초 도남에게는 ‘민족/민족어’가 있었다. 이예다 ‘국민/국어’를 대응시킨 것이 경성제대였다. 이 대학에 진학한 도남의 목적은 “민족정신의 고취와 민족 독립운동의 일익”(『도남잡지』, 을유문화사, 1964, 378쪽)에 있었지만 정작 경성제대는 그에게 학문, 곧 ‘국민/국어’의 세계를 보여 주었다. 국가가 결여된 장면에서 도남은 이 모순을 어떻게 수용·극복해 나갔을까.

이런 물음에는 인문학을 생각할 때 의미심장한 것이 스며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도남의 경우 이 모순성은 다분히 비자각적이었다. 그가 만일 이 모순에 자각적이었다면 임시정부의 존재에 주목, 응분의 행동을 취했을 터이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이 모순을 비자각적 상태에서 그대로 고스란히 수용했다. 이 점은 도남의 한계이자 인문학이 지닌 순수성이었을 터이다. 그것은 도남을 에워싼 학문적 지평으로 메울 수 있다고 그가 믿었던 증거이기도 하다.

그 학문적 지평이 이른바 정신과학이다. 학문이란 과학을 가리킴이며 인문학에서의 그것은 정신과학이라 했고, 또 그것은 문학 해석에서 잘 드러났다. 도남은 당시에 인문학적 지평 속에 부상한 독일식 정신과학으로 국문학 연구에 다다랐기에 그가 놓인 모순성은 이것의 큰 힘 아래에 묻히고 만 것이다. 그는 이 모순성과 정신과학을 맞바꾸었다고 볼 것이다. 그것이 어째서 소중한가. 해결이 아닌 가능성이 그 속에 움트고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례는 사회과학 분야에서 일어났다. 사회과학은 당시의 학풍으로는 유물사관에 입각한 사회경제사연구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유진오, 박문규, 최용달, 이강국 등이 조직한 조선 사회사

정연구회(1931)도 이러한 것의 반영이다. 마르크스 사상을 가르친 교수도 있었지만, 순수한 학문에만 몰두한 학자들도 물론 있었다. 사회의 발전을 검토함에 있어 무엇보다 사회발전의 과학성을 경제 분야에서 찾아내고자 했음이 일반적 학풍이었다.

이러한 학풍 역시 식민지의 현실에서 보면 모순이 아닐 수 없었다. 제국주의 지향의 일본 국가는 어차피 청산되어야 할 대상, 비판의 대상이 아니면 안 되었다. 사회경제사의 처지에서 보면,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에서 보면, 자본주의에 입각한 제국주의는 자동적으로 몰락하게 되어 있다. 반복되는 경제공황에 의하든, 노동자의 궁핍에 의하든, 그 내부가 안고 있는 모순 때문에 자기붕괴가 필연적이다. 자본주의의 과학적 연구에 의해 이러한 사실이 명백해졌을 때 지식이나 노동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바로 여기에 초기 마르크스주의의 혁명적 낭만주의와 후기 마르크스, 곧 과학적 이론 사이의 모순이 놓여 있었다. 과학적 이론은, 그러니까 경제결정론은 혁명의 필연성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그 실천의 필요성을 설명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 모순은 인문학의 도남이 직면한 ‘국가/국어’ 대 ‘민족/민족어’의 모순성과 죽히 대응된다.

경성제대란 새삼 무엇인가. 제1회 수석 입학생이자 졸업생인 유진오가 이러한 담화를 남긴 바 있음을 군도 알고 있다. “정치적 방면에서 해방 직후는 (경성제대 졸업생들이—인용자) 눈에 띄는 활동을 하겠다고 할 수는 없다. 곧 일반 사회에서 경성제대 졸업생은 친일파이든가 아니면 공산주의자로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경성제국대학 창립 50주년 기념지 『紺碧遙かに』, 耕文社, 1974, 411쪽)라고. 군은 이 대목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꼭 경성제대에만 국한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남한이나 북한의 나라 만들기에서 그들이 중추적 몫을 모르는 사이에 해왔다고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요약전대 경성제대란 인문학에서도 사회과학에서도 자기 모순성을 안고 있었다는 것, 그 때문에 그 다음 세대는 문화담당자로서의 사명감을 부여받을 수 있었다. 나는 이 점을 유독 무겁게 생각하며 또 그 세대감각의 의의를 크게 부각시키고자 한다. 그 사명감이란 위의 모순성을, 가능한 한도 내에서 학문적으로 그 밀도를 높이는 작업을 가리킴이다.

이러한 학문의 순도랄까, 밀도의 구축 또는 탐구로 나아갈 수 있는 사명감이 행인지 불행인지 전후 세대인 나의 세대에 주어져 있었다.

3. 경제결정론으로서의 근대에 대한 인식

나의 세대적 감각이 어찌 없었겠는가. 일제 말기 일본식 교육과 해방 직후 미국식 교육을 받았으며, 철이 들 무렵 6·25를 겪었다. 포성과 UN군과 피난민, 그리고 전란의 궁핍이 내 세대의 것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민족 전체의 것인 만큼 표 나게 세대감각을 형성할 수는 없었다. 총명한지라 군은 이 사실이 무엇을 뜻하는지 직감했을 터이다. 전후 세대로 말해지는 내 세대의 감각이란 내세울 만한 것이 따로 없다는 것을. 설사 있더라도 그것은 민족 전체의 것에 수렴될 수밖에 없음을. 나의 세대감각이 민족 전체의 감각이었기에 거대하고도 성스러운 사명감이 부여된 형국이었다. 그 사명감은 흡사 나무가 자라듯 자연스러웠는데 또 천둥처럼 큰 울림이기도 했다.

두루 이는 바 해방공간은 나라 만들기로 요약된다. 나라 찾기에서 나라 만들기로의 인식 변화는 그 어떤 명제보다 우선하는 민족적 과제였다. 나라 만들기의 모델은 부르주아 단독 독재형, 노동계급 단독 독재형, 연합 독재형 등으로 부상되었으나 이런저런 사정으로 앞의 둘 만이 현실적으로 채택되어, 대한민국(1948. 8. 15)이, 이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1948. 9. 9)이 이루어졌다. 어느 쪽이든 국가를 세운 이상 그 국가의 존립근거를 가장 본질적인 데서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바로 그것이 식민사관 극복이었다. 식민사관이 과학으로 엄존하는 한, 새나라를 세워서 무엇 하겠는가. 다시 식민지가 될 것은 명약관화한 것. 그런데 만일 그것이 제국주의 학자들이 만들어 낸 이데올로기의 일종이라면 어떠할까. 이를 밝혀 보라는 것이 남북한을 통틀어 인문학에 주어진 사명감이었다.

그렇다면 식민사관 극복의 과제에서 나의 세대에 주어진 사명감은 도남이나 박문규, 이강국 등의 그것과 어떤 변별점이 있어야 하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 학문적 밀도에 있다고 믿었다. 나라 찾기에 몰두한 윗세대의 인문학 및 사회학에

서의 조급성이나 심정적 요소를 털어내고 오직 과학성에 입각하여 식민사관이 지닌 이데올로기의 허구성을 비판하는 것으로 이 사정을 요약할 수 있다. 우리 세대의 인문학은 그 성과 여부는 별도로 하고라도 이 문제에 성스러운 사명감으로 임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사명감이 열정을 동반하고 그 때문에 생긴 추진력은 우리의 몸을 매우 무겁게 했다. 무엇보다 우리는 식민사관의 학문적 근거를 탐색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것은 두 가지 근거에서 출발되었는 바, ‘근대’로 말해지는 두 기동인 국민국가와 자본제 생산양식이 그것이었고, 또 이 둘은 몸이 한데 붙은 삼쌍둥이여서 분리불가능이었다. 이 괴물이 작동되는 문학적 현상, 그것만이 근대문학이며 그렇지 않은 것은 아무리 대단해도 근대문학일 수 없다는 것. 한국의 근대에 대응되는 것만이 한국근대문학이라는 것.

이 순간 한갓 문학도인 내가 얼마나 당황했는가를 굳은 아마도 상상키 어려울 것이다. 왜냐면 국민국가를 배우기 위해 정치학 공부, 자본제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경제학에의 천착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이 둘이 분리불가능한 상태였지만 굳이 그 선후를 가린다면 자본제가 우선이었음이 드러나지 않겠는가. 근대란 자본제 생산양식이 이루어 냈다는 사실이 당시의 학문적 수준에서는 제일 과학성의 밀도가 높은 것으로 보였다. 오늘의 시선에서 보면 한갓 경제결정론에 지나지 않지만, 당시로서는 제일 학문적인 것으로 보였다. 왜냐면 식민사관의 성립 근거가 바로 이 사회경제사적 시선에서 왔기 때문이다. 곧 한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자본제 생산양식으로 극복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식민사관의 성립 유무가 놓여 있다고 인식되었던 까닭이다.

이러한 사회경제사적 시선은 남북한 학자들의 공동 관심사로 부상했다. 조선사의 어느 시점에서 이 자본제 생산양식의 맹아를 찾아내기만 하면 제일차적 발판이 구축될 수 있다고 우리는 굳게 믿었다. 이른바 내재적 발전론이 그것이다. 북한 학자들은 18세기 광산 운영 속에서 그러한 맹아를 찾아냈고, 남한에서도 18세기 양안(量案) 분석을 통해 농업경영에서 이 맹아를 검출해 내었을 때(김용섭, 『조선후기 농업경제사 연구』, 1970~71), 우리 세대의 사명감은 모종의 실감으로 다가왔다. 내가 공저로 『한국문학사』(1973)를 쓴 것이 그 증거다. 굳은 이 기묘한

저서를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공저라고 했거니와 실상 그 저자들은 사회경제사 쪽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식민사관이 깡그리 극복되었던가. 이 물음이 그 뒤에 줄곧 내 뒷덜미를 잡고 놓지 않았다. 다음 두 가지 이유에서 그러했던 바, 하나는 인문학이 사회경제사에 흡수되어 그 독자성을 상실했음에서 왔다. 당시 내가 믿었던 것은 인문학과 사회경제사의 공존 또는 결합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경제결정론은 나를 불안케 했다. 인문학도인 나는 고아처럼 점점 설 마당이 없어 보였다. 다른 하나는, 이 점이 중요한데, 경제결정론이 한갓 또 다른 이데올로기임을 지적한 목소리들에 접했음이다. 식민지 수탈론도 식민지 근대화론도 그 사정 속에 있어 보였다. 진작 있어 왔던 이 목소리가 비로소 내 귀에 울려 왔던 것이다. 그 울림이 증폭되자 과학이나 학문에서 말하는 진리란 과연 무엇일까라는 의문 앞에서 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물음은 뉴턴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비유함으로써 설명될 수 있음도 알아차릴 수 있었다. 진리가 진리일 수 있는 것은 그 자체에 허위가 될 가능성(falsifiability)이 내포되어 있을 동안이라는, 상대성 이론을 둘러싼 세기적 문제계가 이를 잘 말해 주고 있다(K. Popper, *Conjectures and Refutations: The Growth of Scientific Knowledge*, 1953; 이한구 옮김, 『추측과 논박』, 민음사, 2001 수록).

이 기준에 따른다면 경제결정론도, '한동안'이라는 유보적 조건 속에서의 사안이라는 것, 따라서 나의 인문학이 사회경제사와의 결합이라고는 하나 따지고 보면 그것의 부속물로 인식된 것도 그러한 유보적 조건 속에서의 일이었다. 요컨대 한 시대의 진리랄까 학설이란, 그러니까 세대감각에 관련되어 이야기하면, 식민지 수탈론도, 식민지 근대화론도 원리적으로는 상대적 개념이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이 밀려오자 나의 세대감각은 사명감과 더불어 종언을 고한 것이다. 굳이 말해 도남이나 박문규의 도달점과 근소한 학문적 차이를 이루어 냈다 할지라도 더 이상 나아갈 지평은 보이지 않았다. 저마다의 세대는 '볼 수 있는 것'을 볼 따름이기에 이 얼마나 공평한가. 굳은 내가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직감했을 줄로 믿는다. 나의 세대적 감각, 감히 말해 우리 세대의 사명감 수행에 결정적인 요

인이 이른바 경제결정론이었다는 사실 말이다. 이 과제를 다음 세대는 또는 다른 세대는 어떻게 체험하고 있었을까. 왜냐면 내 세대에서의 주춧돌이 경제결정론이었다면, 필시 다음 세대도 이를 정면으로 돌파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각 세대가 지닌 문화 담당 기능이 그것이다.

4. '거짓 희망'을 관통한 386 세대의 주체성

오늘의 처지에서 보면 경제결정론의 한계랄까 오류는 너무도 명백한 만큼 이를 문제 삼기란 좀 뭇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군과 더불어 내가 대화하고 있는 이 장면이 세대감각에 국한되었음에 주목하길 바란다. 경제결정론만큼 과학적인 것이 나의 세대감각 속엔 달리 없었고, 더구나 그것 없이는 식민사관 극복의 열쇠를 찾을 수 없었다. 인문학은, 사회과학에 기울어진 이 결정론의 종속물이어도 상관 없다고 믿었다.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경제결정론자들은 실상은 서로 상반된 명제를 동시에 주장한 형국이었다. 모든 것, 그러니까 혁명은 경제가 결정하는 것인 만큼 인간의 주체적 활동 영역일 수 없지만, 동시에 그럼에도 혁명이나 변혁을 주장한다면 이는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이 사실을 나의 세대는 설사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실감할 수는 없었다. 그것은 저 루카치의 고명한 저술 『역사와 계급의식』(1923)이 나오기 전까지의 상황에 비유될 수 없을까.

역사란 프롤레타리아의 주체성을 자각한 실천적 주체가 창조한다는 것, 그러니까 자연적 인과율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 이러한 주장은 헤겔적인 역사의 이성을 마르크스적 집단적(계급적) 의식으로 전환시켰다고 볼 것이다. 마르크스주의에 헤겔적 변증법을 도입한 주체성론이 당시에 던진 충격은 컸으리라 짐작된다. 유럽의 마르크스주의와 비서구의 그것을 양분할 정도였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 중심의 실천자들은 자기 모순에서 한발자국도 벗어나고자 하지 않았고, 이로써 혁명을 완주해 나갔다. 주체성론이 반동으로 규정된 것도 이 때문이었다. 세계를 양분할 정도의 세력을 갖춘 실세로서의 스탈린주의를 그 누가 무시하거나 거부할 수 있었겠는가. 또 군은 이 대목에서 주목해야

한다. 설사 스탈린주의가 실제로 군림한 그 시대 속에서도 지식인의 자세가 있었다는 사실 말이다.

자본주의의 과학적 해명에 의해 그것이 자멸하게 되어 있다면, 또 그것이 과학이라면, 지식인이나 노동자는 대체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과학적 이론은 혁명의 필연성을 해명하지만 실천의 필요성을 설명하지는 않는다는 이 모순. 실상이 모순은 칸트의 제3의 안티노미(내적 필연성과 외적 필연성의 모순, 의욕적 주관주의와 결정론적 객관주의의 모순)에 근거하고 마르크스도 이 노선 위에 있다고 오늘날엔 말해진다. 그러니까 독일 관념론 특유의 것이며 루카치가 선 곳도 여기였다. 요컨대 루카치가, 역사 속의 의식적 실천이나 창조성이 들어설 여지, 곧 자유가 그 과정에 들어갈 수 있는, 역사적 힘으로 될 수 있는 분기점을 탐색하고자 했던 것이라면, 일본의 지식층은 어떠했을까.

미키 기요시(三木清)의 열렬한 독자인 가쓰다 슈이치(勝田守一)는 당시를 회고하여, “자기 탐구를 지향하는 청년들이, 내적 주체성의 확립과, 사회과학의 이론적 대상인 역사적 사회의 필연적 운동 사이의 긴장을 그대로 싸안으며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물음을 이론적으로 심화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결코 약하지 않았다”라고 『미키 기요시 전집』 월보(月報)에서 말했다. 사회적 실천이야말로 마르크스주의의 알파요 오메가이지만 그 실천에 몸을 맡기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납득할 이유, 자기 것으로서 실감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했다. 특히 노동자도 농민도 아닌 지식인이나 학생에 있어서는 더구나 칸트나 헤겔의 논리에 다소나마 젖은 지식인 학생에 있어서는 그것은 피하기 어려운 욕구였다.(三浦雅士, 『批評と
いう鬱』, 岩波書店, 2001, 195쪽)

윗글에서 내가 이른바 한국의 세칭 386세대의 얼굴을 얼핏 떠올렸다면 이는 파민반응일까. 어떤 식으로 규정하든 386세대의 속성은 주체성과 분리시켜 논할 수 없다고 나는 믿는다. 어떠한 역사적 실천에 임할지라도 결정론에 의거할 수 없다는 것, 그렇지만 그 결정론을 또 깡그리 무시할 수도 없다는 것, 그 둘 사이의

분기점이랄까 거리를 쫓 수 있는 감각을 갖춘 세대가 386세대라는 것. 이 세대 감각을 당사자의 입으로 말한 한 대목을 이 자리에서 군에게 보여 주고 싶다.

박혜정. 서울대에서 “반전반핵 양키고홈”, “독재타도”를 외치며 세 명의 학생이 죽어간 86년 5월, 한강에서 투신자살한 국문과 83학번 여학생이다.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술한 언어들 속에 나의 보잘 것 없는 한 마디가 보태진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니? 그러나 다른 술한 언어가 그 각각의 것이듯, 나의 언어는 나의 것으로, 나는 나의 언어로 말할 수 있겠지”라고 시작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어지는 언어는 운동권 전위의 대열에 서기를 거부했으며 민중을 사랑할 수도, 하는 척 할 수도 없는 삶을 부끄러워하고 혼란스럽게 흐트러지고 있었다.(조판자, 「이 야기가 찾은 언어의 뿌리」, 『사이』 제3호, 2007. 11, 241쪽)

이것은 자살한 386세대의 목소리이자 회색인의 모습이다. 스스로 죽음으로써 그는 이론과 실천의 거리 측정에 실패했고, 따라서 그의 주체성은 자기를 향한 창(槍)으로 작동되었을 따름이다. 그렇다면 끝내 이론과 실천의 거리재기, 역사의 진행 과정 속에 창의성이 끼어들 수 있는 분기점을 모색한 경우는 어떠할까. 이 물음의 중요성은 그것이 인문학의 수준으로 향하고 있음에서 온다.

‘거짓 희망’이 아닌 참된 희망을 찾아 헤매다 독재와 맞서고 또 북한의 주체 사상까지 수용했으나 이 모두가 ‘거짓 희망’의 일종임을 알았을 때, 박혜정 모양 자살할 수도 있지만, 자살을 피하고 살아가는 방도는 무엇인가. 역사 자체를 ‘거짓 희망’으로 상정하고 이를 적으로 삼아 투쟁하는 길이 있을 수 있다. 요컨대 자기 속의 적을 가두고 자기와 고립무원의 투쟁을 하는 것. 여기에서 생겨나는 것이 인문학의 한 가지 유형을 이루었다면 어떠할까. 군이 말해 386세대의 인문학의 한 모습 말이다.

식민지/제국의 상호 연환의 역사를 반성해 보는 것은 세계사의 승자 측에 자국을 편입치 않고 오늘의 세계적 분쟁에 어떻게 끼어들까라는 문제를 직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식민지 민족의 경제적 발전을 기도하는 ‘협력자’의 주체성을 찾는 것은 중요한 일이 아니다. 그보다는 식민지/제국을 관통하는 자기방어적인 ‘근대화’를 반성하고 세계인이 민주적 공생적 관계에로 열려지기 위한 역사 인식을 탐구해야 하리라. 식민지/제국에 있어 생존의 조건을 고찰하고 지배의 욕망과 생존의 희망을 잇는 현실과 리얼폴리틱스 사이에서 유동하는 ‘지(知)’에 육박해 보자.(趙寬子, 『植民地朝鮮/帝國日本の文化連環』, 有志社, 2007, 173~174쪽)

주체성을 잠시 보류하고라도, 미키 기요시의 동아협동체를 수용하는 서인식, 인정식 등 조선의 좌익계 지식인들의 전향 논리란 과연 무엇인가. 근대화를 통한 아시아 해방의 지평이 동아협동체 속에 엮여있었다면 그것은 경제결정론 속에서 인간의 주체적 창의성이 개입하는 분기점을 찾는 것이 아니었을까.

이것은 식민지 통치를 ‘비식민지 정책’이라 재정의하고 변증해 가는 자기기만적 윤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만적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수준에서 정당성을 갖는 것처럼 말해지는 배경에는 아시아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말하는 지역 발전의 논리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아시아 민족들의 해방, 공생을 말하는 ‘식민지 없는 제국주의’의 언설은 제국 외부의 독립국가를 향해 발화될 외교 이념이 아니라 제국 내부의 식민지에도 반사되어 내적 사회경제적 발전이 이야기됩니다. 그리하여 제국주의의 식민지화에 의한 주체를 부정당해 온 식민지 민족이 주체성을 회복하여 자립 발전해 가는 것을 재촉하는 논리로 수용되어 갑니다. ‘식민지 없는 제국주의’를 재검토하는 논의는 이러한 점을 둘러싸고 다시 비판적으로 탐구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米谷匡史, 『アジア/日本』, 岩波書店, 2006, 123~124쪽; 요네타니 마사후미, 『아시아/일본』, 조은미 옮김, 그린비, 2010)

자살 직전까지 이룬 386세대의 인문학의 가능성은 이 주체성을 역사 속에서 재고자 할 때 가까스로 왔다고 하면 어떠할까. 군은 이런 진술이 무엇을 뜻

하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386세대의 주체성이란 역사 속의 일이라는 것, 또 그것은 근대의 초극을 모색하면서도 결국 ‘근대’ 속의 일이라는 것. 그러기에 386세대에게는 문화담당자로서의 사명감이 그나마 남아 있는 바, 이는 나의 세대와의 연계를 체감케 하는 문화담당 기능의 가능성이 아니겠는가. ‘거짓 희망’을 피하기 위한 자살 이면에서 386세대는 이처럼 어느 수준에서 그 사명감을 갖추고 있었고, 그것이 주체성에 의거한 가부장제적 전승이었다고 한다면, 이에 비할 때 군의 세대는 어떠할까.

5. 이중어 앞에 노출된 인문학적 세대감각

386세대와 군의 세대를 구분하는 지표 중의 하나는 이른바 국민교육 현장이 아닐까 싶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명제를 DNA에 새긴 386세대에 비해 군의 세대는 얼마나 난감한가. 저 국민교육 현장이 철나기 전 먼 기억 속에서 울리고 있었으니까. 이런 점에서 군의 세대는 생물학적으로 아주 신종자(新種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386세대 쪽보다는 군의 다음 세대, 곧 이른바 신종자 쪽에 한 발이 빠져 있는 형국이 아닐까.

잠시 그 신종자를 보자. 이 신종자의 명제는 태어남에 대한 무근거성이다. 아무런 사명도, 목적도 의도도 없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被投性]에 지나지 않으며, 따라서 절대적으로 혼자이며 그래서 불안과 공포 속에 놓여 있을 뿐이며 이 속에서 자기를 만들어 가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신종자에 접근된 군의 세대는 386세대보다는 조금은 자유롭게 세계의 어느 지역이나 민족, 또는 국가나 종교를 초월해 세계 시민으로 설 수조차 있다. 민족이나 국가 또는 종교와는 무관한 인간 자체의 실존적 조건이 무엇보다 우선했던 것이기에 세계는 군과 같은 동류로 총만 하다는 자신감이 군의 세대감각의 한 모퉁이에 자리하고 있다. 한국인으로 세계 속에 우뚝 서기 전에 먼저 인간으로 설 수 있는 세대이기에 군의 세대는, 설사 신종자에는 여러모로 미치지 못하지만, 얼마나 외롭고 또 불안하며 그 때문에 얼마나 당당한가.

이때 내가 주목하는 것은 군의 세대가 사용하는 언어이다. 물을 것도 없이 그 언어는 한국어다. 그러나 그것은 개별어이면서 동시에 보편어에 접근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장면에서 한때 구조주의자로부터 배척당한 언어본능설에 근거한 촘스키의 언어관이 새삼 빛을 발하고 있지 않았던가. 인간이란 종자는 보편 문법(언어)을 갖고 태어났다는 것, 그것이 개별언어권에 접할 때 변형되어 나타난다는 것. 한국어란 그런 것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이 분기점이 극히 자연스럽듯, 그 역행도 그러할 것이다. 개별어로서의 한국어는 이 분기점을 앞뒤로 하여 보편어로 재빨리 전환될 수 있을 터이다. 이러한 분기점의 인식은 386세대와 구별되는 또 다른 변별점이 아닐 수 없다. 군의 세대가 1940년대의 이중어 공간에 주목한 것은 결코 우연일 수 없다. 그것은 개별어와 보편어의 분기점에 대한 일종의 변형이 아닐 수 없다. ‘국민문학’이라는 명칭으로 포괄되는 1940년대의 문화 인식 공간에 주목할 때 이 분기점의 인식은 핵심 개념이다.

이 시기의 언어 상황은 이중어 상황이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두 가지 언어가 우열관계에 있으면서 서로 뒤섞이는 것을 말한다. 문학에서는 일본어를 사용하면 서도 조선적인 감정을 부여하기 위해 그것을 뒤틀어서 사용하는 전유행위로 나타났다. 이것은 제국주의의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조선의 고유한 특성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조선의 현실이 일본어를 통해 엑조티시즘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일본어를 조선어의 영향권 내로 끌어들이어 사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언어 사용만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김사량의 「풀속 깊이」나 최병일의 「배나무」처럼 언어 비틀기가 제국주의 담론을 비트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윤대석, 「1940년대 ‘국민문학’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06)

군의 세대의 처지에서 보면 식민 체험의 전 과정에서 제일 주목되는 것이 1940년대일 수밖에 없다. 이중어 공간이 거기 생생히 살아 있었던 까닭이다. 제국의 언어인 일본어와 조선어가 뒤섞이고 또 뒤틀리는 분기점과 그 자장에 다가갈수록 제국의 언어인 일본어도 개별어로서의 조선어와 등가일 수밖에 없게 된

다. 실로 기묘한 이 체험은 군의 세대에겐 놀라움도 기묘함도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지 않았을까. 이 분기점의 인식은 주체와 대상의 인식 범주의 산물인 저항과 협력의 논리와는 단연 구별되며 또한 흔히 말하는 탈식민주의와도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 거리재기의 중요성은 ‘나’의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너’의 것도 아님에서 온다. 이중어 글쓰기 공간이라고 바꾸어 부른다면 설명하기가 조금 쉬워질 것이다.

1940년대 ‘국민문학’적 상황이란 제국의 것도 아니지만 조선의 것도 아니라는 것, 따라서 그것에 대한 연구란 일본제국의 속성을 이해하기 위한 것도 아니지만, 조선의 그것의 이해도 아니라는 것. 굳이 말해 인류사에서의 근대라는 한 시기의 동시대성의 체험에 다름 아니라는 것. 이를 두고 근대에 의한 초극이라 부를 법한 점도 있어 보인다(H. Harootunian, *Overcome by Modernit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0). 그렇지만 이중어 글쓰기를 문학적 측면에서 검토할 때 아주 특별한 요인이 무의식 속에서 작동되지 않았을까. 일종의 글쓰기 속에 숨은 쾌락에 동참하기라고 말해질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었을 터인데, 왜냐면 이것 없이는 어떤 연구도 그 밀도는 물론 지속성도 갖추기 어렵다고 내가 믿기 때문이다. 언어 자체가 본능의 소산이듯 이 쾌락 역시 같은 뿌리에 닿아 있을 터이다. 그러나 아직도 나는 군의 세대에서 이 과제를 표 나게 엇본 바 없기에 더 이상 말해 볼 재간이 없다. 386세대에 대해 내가 그토록 간절히 언급한 것에 비해 군의 세대에 대해서는 이 말을 아낄 수밖에 없는데, 그만큼 군의 세대의 가능성을 믿기 때문이다. 언어본능과 자유의 관계함에 대한 사유 말이다.

6. 무한자(無漢字) 세대와 문화 담당층의 소멸을 앞에 놓고

내게 있어 근대문학이란 국민국가를 전제로 한 것이며 그것은 상해 임시정부로 표상된 국가 개념이었다. 그 국가가 내세운 언어로 하는 문학이 한국근대문학이 아닐 수 없다. 일제 통치부가 여러 가지 조직과 행정 단위를 식민통치화하면서도 이 문학제도만은 제외했음도 두루 이는 사실이다. 한국근대문학사의 성립근거는

이처럼 자명한 데서 왔다. 그런데 일제 통치부가 이 문학제도까지 통치권 속에 넣고자 한 것이 이른바 조선어학회사건(1942. 10. 1)이다. 3·1 운동의 지도자 숫자와 똑같이 33명에 맞추고 또 총독부 시정일(施政日, 공휴일)에 맞추어 감행한 이 사건이 갖는 상징성은 일제 통치부 측에서 보면 ‘한국근대문학’의 종언에 해당된다(줄고, 「이중어 글쓰기 공간에서의 글쓰기 유형론」, 『김윤식 선집(7)』, 솔출판사, 2005). 그러나 나의 처지에서 보면 또 우리 세대의 시선에서 보면 단지 암흑기(1942. 10. 1~1945. 8. 15)에 지나지 않는 만큼 건너뛰면 그만인 시대인 것이다.

386세대는 이를 어떻게 인식했을까. 경제결정론 하나로 식민사관 극복으로 달려간 나의 세대에 비해 386세대는 주체성과 경제결정론을 동시에 인식함으로써 커다란 유연성을 획득하고 있었다. 그로써 386세대는, 나의 세대와 비판적으로 연결되었고, 동시에 군의 세대를 향해서도 열려 있었다고 볼 것이다. 문화담당층으로서의 소임도 이로써 가능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군의 세대는 이 점에서, 감히 말하건대 매우 단선적이라 할 수 없을까. 그것은 군의 세대가 갖고 있는 본능(자유)에서 말미암았다. 군은 속았는지도 모른다. 암흑기라 말해진 공간이란 군의 세대감각으로 보면 실로 눈부신 만화경이 아니었던가. 국내는 물론 일본 본토도 만주까지 광대한 저널리즘이 이중어 공간으로 펼쳐져 있었고 분량 또한 상상을 넘어서고 있지 않았던가.

조금만 주의 깊게 읽는다면 그 이중어 글쓰기란 적어도 여섯 가지 이상의 유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 문단에 진출한 김사량, 유진오, 이효석 등이 제1형식이라면, 제2형식은 이광수의 경우, 제3형식은 최재서의 경우, 제4형식은 한설야로 대표되는 창작 유형, 제5형식은 조선어 자체의 이중성을 문제 삼은 것(이기영의 경우), 제6형식으로는 김중환의 시작(詩作) 방식 등등. 이들 어느 형식도 내선일체 사상 일변도의 친일문화과는 일정한 거리를 갖고 있었다. 군의 세대는 이 공간 앞에서 숨을 쉴 수 있었는데 거기엔 숨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군이 놓인, 던져진 존재로서의 생리적 조건의 인식에서 왔다.

이 모든 현상들은 거시적으로는 식민체험의 세대적 감각에서 말미암은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그러기에 이중어 공간 앞에 넋을 잃고 있는 군의 세대도 식민

체험의 세대적 감각에 수렴될 성질의 것이 아닐 수 없다. 암흑기 건너뛰기와 만화경 즐기기란 386세대의 주체성과 함께 이 점에서 한 배를 탄 주민이 아니겠는가. 마지막으로 내가 386세대에게 그렇게 말을 많이 걸었지만 군의 세대에게 이처럼 말을 아끼고 있는 이유를 조금 말해 봄으로써 이 어수선한 글을 마치고 싶다.

두루 아는 바 어느 세대나 그 전대의 문화를 이어갈 문화담당층으로서의 세대적 감각이 있다. 군의 세대가 실사 던져진 존재로서의 실존적 생리적 조건을 자각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또 거기에서 아무리 많은 자유가 방출될지라도 식민지 체험의 범주 내에서 벗어나지 않았음에 주목하고 싶다. 한자 사용 체계 속의 사안인 이종어 글쓰기 공간이 이 사실을 직간접으로 말해 주고 있는 만큼 군의 세대 역시 문화담당층의 임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 장면에서 군의 세대는 386세대를 조금은 부러워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것은 군의 세대가 갖고 있지 않거나 적어도 군의 세대에 결여된 그 무엇을 386세대가 갖고 있음에 관련된다. 한자 사용의 위상 차이가 그것이다.

군의 세대는 한자를 사용하긴 해도 거의 무한자화(無漢字化)에 가깝다. 인문학을 위해 억지로 학습한 한자인 만큼 매우 제한적이며 따라서 기회만 오면 한글 순수사용으로 거침없이 나아가기 마련이다. 또 그것은 가속도가 붙은 사안이기도 하다. 무제한의 한글전용 앞에 제일 난처한 것의 하나에 문화담당 기능이 있다. 식민 체험의 전과정이 한자 사용 속에서 조성되고 그 전달체계가 이루어졌음을 염두에 둔다면 이 무한자화 시대의 도래는 문화담당층의 기능 상실의 목전에 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국어/한글이란 새삼 무엇이뇨. 보편어/보편문법과 쌍을 이루는 것이며, 그것은 또 한순간 영어/영문법과 지척에 있을 터이다. 이 사태 앞에 군의 세대는 어떻게 장차 반응할까. 실로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도 그럴 것이 '무제한의 한글 전용화', 곧 무제한에 가까운 자국 문자의 일방적 질주는 동양 삼국에서는 단연 유별나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한글은 특정 문자가 아니라 투명체의 기호이며, 한 발자국만 나서면 보편 문자로 변형될 수 있는 가능체라 할 것이다.

군의 다음 세대의 전망은 어떠할까. 군의 세대는 그것이 다음처럼 한 눈에 들

어울 것으로 추정된다. 곧 인류사의 보편화가 그것이다. 그 보편어가 영어일지도 모르지만, 이 보편어화예의 출구찾기에 있어 굳이 다음 세대인 신종자 순수 한글 세대가 제일 민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때 비로소 식민 체험의 세대감각은 소멸될 처지에 놓일 것이다. 그 대신 인류사의 문화담당층으로서의 유별난 세대 감각을 그들이 새로이 부여받게 될 것이다.